與도 野도 "정동기 안된다"

한나라 최고위 부적격 판정 자진사퇴 압박

민주당, 인사라인 문책·대통령 사과 요구

여야 정치권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도 전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나서 정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공식 촉구, 청와대를 당혹하게 함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많은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의 뜻을 알아본 결과 정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이 정부와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잘못된 정부 인사·정책을 보다 냉철하고 치열하게 바로잡고 바꿔야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이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처럼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정 후보자를 지원하면 할수록 여론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야당에 대대적인 공세의 빌미를 제공, 수도권 일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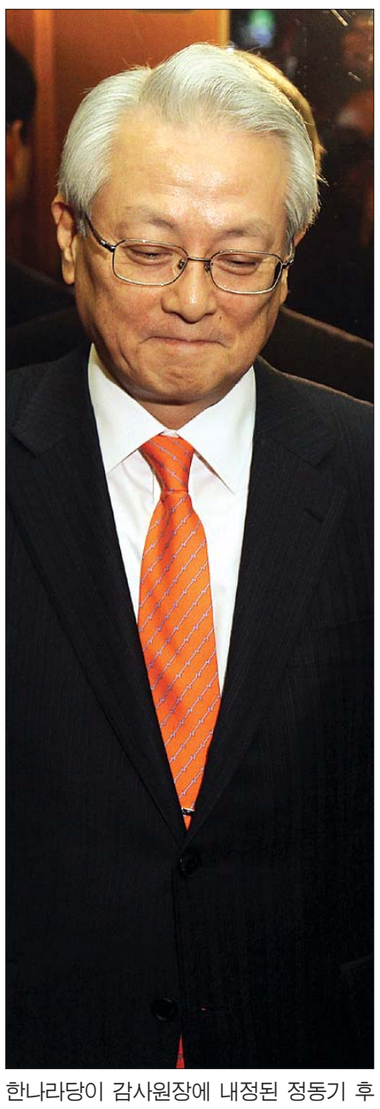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본인의 자질 여부나 지금 거론되는 고액의 변호사 수입 등에 앞서 대통령 측근 인물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지명을 철회하고 다른 적격자를 물색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잘못됐을 때 인정하고 사퇴시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로, 인사청문회를 해서 인준이 안 된다면 더 큰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사실이 자꾸 밝혀지는 '양파 청문회'보다는 정 후보자의 본인을 위해 지명철회 또는 사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만시지탄"이라며 "부적절한 인사를 감사원장 후보로 추천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자신의 측근을 공정성·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려고 무리수를 둔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장과 관계수석이 의견 교환한 결과, 당도 얼마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번에 보여준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입장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이 감사원장에 내정된 정동기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바집 비리' 점입가경

자고나면 새인물…청와대·공기업까지 연루

브로커 유씨 현정부 최고층 로비 시도한 듯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함바집 운영업자인 유상봉(65·구속기소)씨가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일했거나 청와대 소속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씨가 권력의 최상층부까지 접근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일감'이 떨어진 유씨가 대운하 건설 등 대형 토목공사를 공약으로 걸었던 현 정부와 인연이 있는 인사들을 등에 업고 재기를 노렸다는 것이다.

유씨가 검찰 조사에서 로비 대상으로 이름을 댄 것으로 알려진 최영 강원랜드 사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3년부터 산업국장과 경영기획실장으로 일했고, 오세훈 현 시장이 취임한 2007년 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9년 강원랜드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는 올해 초 'MB와 함께 한 1500일'이라는 에세이집을 낸 바 있다.

청와대 인사 중에는 배건기 민정수석실 전 감찰팀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경찰 출신인 배 전 팀장은 이 대통령이 시장일 때 서울시에서 파견근무를 한 인연으로 대선 캠프에서 경호를 맡았다.

유씨가 권력의 핵심부까지 손을 뻗쳤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설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만큼 축소된 사업을 만회해보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씨는 1998년께 함바집 운영권 사업을 시작했지만 당시는 이미 '돈이 된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함바집을 운영권을 따겠다고 나서면서 시장이 포화상태였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유씨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호남지역 인맥을 활용해 승승장구하다가 이들의 영향력이 줄고 건설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자 대선을 전후해 '줄'을 바꿔 잡아 반전을 노렸을 것이라고 유씨 주변 인물들은 말했다.

유씨가 실제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양대 경찰의 수장을 통해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고 인사 청탁으로 일선 경찰관을 승진시켜주며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재미를 봤다면 이 대통령의 주변 인물을 포섭해 건설현장을 둘러싼 각종 이권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활동무대를 넓히려 했을 수도 있다.

한편 유씨가 친인척을 통해 부산에서 한때 급식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함바집 비리사건의 불똥이 부산으로 튀고 있다. 부산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유씨는 처남인 김모(57)씨 명의로 급식업체인 K유통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부산지역 각종 공사 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업자로부터 거액을 챙긴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도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한 시기여서 부산에서 함바집 및 일선 학교 급식사업을 해온 K유통의 모종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사면초가

'정동기 카드' 집중포화에 감찰실장 '함바집 비리' 연루

청와대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자진 사퇴를 요구한데다 청와대 감찰실장이 '함바 비리'에 연루되면서 사직했기 때문이다.

여권이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해보지도 않고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이는 이명박 정권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고주의 인사로 인해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감사원장 후보를 다시 내정하는 것이 최고의 정국 타개책"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비리' 의혹마저 겹치면서 청와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한 상황이다. 청와대 내부 직원의 비리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배모 감찰팀장이 함바집 운영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청와대는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광주경찰청 충격

"초대청장 이어 양청장까지…" 잇단 비리 의혹에 술렁

'전·현직 경찰 수뇌부 함바 비리'와 관련, 양성철 광주지방경찰청장이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로 인사발령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10일 광주경찰청과 각 경찰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보직 인사를 앞두고 주요 간부들은 사태 추이를 파악하느라 어수선했다. 무엇보다 비리에 연루돼 낙마한 초대 하옥현 전 청장에 이어 양 청장까지 게이트 연루 의혹 제기로 인사발령이 예고됨에 따라 광주지역 경찰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인사 예고와 관련, 광주경찰청 간부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면서도 3년 전 하 청장이 비리연루 혐의로 직위해제된데 이어 양 청장까지 낙마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특히 보직인사를 앞두고 조 청장이 김학역 경찰대 학생지도부장(경무관)을 직무대리로 발탁한 것을 두고, 간부들 사이에서는 각종 비리와 사고로 얼룩진 광주경찰청에 대한 조직 개혁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대대적인 개혁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하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경찰관들의 비리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했던 청장이 이제는 비리 의혹으로 인사발령 조치된다는 데, 사실 여부를 떠나 배신감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모 경찰서 간부는 "그간 게이트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언론에 이름이 거론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발령된 적은 없었다"며 "우리 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이미지 추락과 조직 내부 동요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